3/ 일본인 식민자 사회가 바라본 3.1운동

‘재조일본인’의 ‘조선소요’(朝鮮騷擾) 인식*

이동훈

1910년대 후반(혹은 1920년 초) 대구의 일본인 상점 거리인 모토마치도리(元町通リ)의 모습
출처: 佐瀬直衛 編, 『最近大邱要覧』, 大邱商業會議所, 1920.

이동훈(李東勳) 한국외국어대 일본어과 졸업 후 도쿄대 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에서 지역문화연구 전공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는 대학에서 일본근현대사와 일본 사회 · 문화 등을 가르치고 있다. 최근 박사학위논문을 수정한 단행본 『在朝日本人社会の形成: 植民地空間の変容と意識構造』(明石書店, 2019)를 간행했다. 재조일본인의 역사를 비롯해 메이지 · 다이쇼 시기 일본 지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 이 논문은 2019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https://doi.org/10.29154/ILBI.2019.21.072

1. ‘재조일본인’이라는 용어는 적절한가

『일본비평』 특집 주제에 맞춰 이 글에서는 일본인의 3.1운동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인 중에서도 일제강점기를 전후하여 한반도에 형성된 일본인 식민자 사회, 이른바 ‘재조일본인’ 사회가 3.1운동을 어떻게 바라보았고 인식했는지 고찰하는 것이 이 글의 과제이다.

본격적으로 고찰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조일본인’의 역사를 개괄하고 한일 양국 학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재조일본인’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재조일본인’의 역사를 살펴보면 조선의 개항과 함께 형성되기 시작하여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과 함께 성장했으나 패전 후 소멸한 식민자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현재 한일 양국 학계에서 ‘재조일본인’(이하, 인용 부호를 생략)으로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재조일본인이라는 용어는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용어 사용의 시작은 1970년대 일본 역사학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발상 자체는 재조일본인과 표리관계에 있는 재일조선인과 동일했다.[1] 당시 학계에서, 재일조선인과의 연관성 속에서 명명되고 사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를 용어 그대로 해석하자면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되겠지만 현재 진행형인 재일조선인의 역사와 달리 송환 사업으로 소멸된 식민자 집단을 동일한 방식으로 칭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든다.

아울러 재조일본인이라는 용어에는 중요한 요소가 결여되어 있기도 하다. 종주국에서 식민지로 이주한 식민자 집단을 지칭하면서도 식민(植民)이라는 이주 형태가 명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식민자(colonizer)와 피식민자(the colonized)로 표현하는 기술 방식과 비교하면 재조일본인이라는 명칭이 지닌 개념의 모호함은 더욱 확연해진다. 말하자면 재조일본인은 식민의 개념이 제거된 채 식민자 칭호로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1 ‘재조일본인’ 용어 사용이 확인되는 자료로는 姜在彦, 「在日朝鮮人の六五年」, 『季刊三千里』 8号, 1976, 23쪽; 美藤遼, 「日本仏教の朝鮮布教」, 『季刊三千里』 15号, 1978, 117~124쪽 등이 있다.

이처럼 재조일본인이라는 용어가 지닌 문제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한자어 조합으로 개략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재조일본인이라는 표기가 최선의 선택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재조일본인이라는 용어가 지닌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양국의 역사학계에 정착·공유되고 있는 현황을 존중하여 이 글에서는 이를 역사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재조일본인에 더하여 '식민자', '식민자 사회'를 사용함으로써 개념의 모호함을 상쇄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글에서는 재조일본인이라는 용어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재조일본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구자 혹은 연구 분야에 따라 재조일본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방식에 차이가 보인다. 광의에서 재조일본인은 식민지 관료와 경찰 및 군인 등의 식민지 통치 권력과 민간의 일본인사회를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되지만, 정치학 분야에서는 식민지 통치 권력과 대치하는 민간의 일본인사회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협의와 광의의 개념이 혼용되며 연구자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면서 이 글에서는 식민지 통치 권력과 민간의 일본인 사회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재조일본인을 사용하고 있다. 개념적으로는 '부산 개항 이후 전후의 송환 시기까지 어느 정도 장기간 한반도에 거주한 일본인'으로 정의한다. 부산의 개항 이후를 대상으로 하므로 초량왜관에 거류했던 쓰시마(対馬)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정주 의식의 유무는 묻지 않는다. 초기 개항장은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류민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한반도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정주 의식이 점점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체재기간은 '어느 정도 장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정 기간 근무를 거쳐 본국으로 돌아간 관료와 교원 등은 포함하나 관광·시찰 등으로 단기간 체류한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2]

2 이와 관련해서는 재조일본인과 표리관계에 있는 재일조선인의 정의를 부분적으로 참조했다. 外村大, 『在日朝鮮人社会の歴史学的研究: 形成·構造·変容』, 綠蔭書房, 2004, 3~4쪽.

이 글에서는 민간의 일본인 사회를 비롯해 총독부 관료들의 3.1운동 인식도 다루지만 그 초점은 민간인 사회의 인식에 맞춰져 있다. 본문에서 사용하는 일본인 사회 또한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민간의 일본인 사회를 가리킨다. 하지만 재조일본인 사회를 식민지 통치 권력과 민간인으로 명확히 분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민간의 재조일본인은 조선인과의 관계에서는 지배민족으로 군림했지만 그와 동시에 조선인과 동일하게 식민지 지배를 받는 대상이기도 했다.[3] 이러한 양면적 성격은 재조일본인 사회를 이해할 때 중요한 특성이기도 하다. 실제로 『조선신사록』(朝鮮紳士錄)에 실린 재조일본인 개개인의 이력을 보면, 관리로 있다가 퇴직하고 민간인이 된 예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광의에서 재조일본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만 민간의 일본인 사회에 주목하고 있다는 다소 복잡한 설명을 하고 있는 점 또한 이러한 재조일본인 사회의 양면적 특성을 고려한 결과이다.

2. 3.1운동을 바라보는 재조일본인들의 인식은 왜 달랐을까?

재조일본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일본 식민지시기(일제강점기) 연구가 정치사·경제사를 벗어나 사회사와 문화사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재조일본인 연구 또한 다양화·세분화되고 있다. 역사학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학, 문화인류학, 도시건축학 등으로 확산되면서 다양한 분석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그중 우치다 준은 미국학계의 주목할 만한 재조일본인 연구자이다.[4] 우치다의 연구는 계통적으로 보면 미국 학계의 선구적 연구자인 피터 두스

3 이는 통감부 설치 이후 1910년대에 식민지 통치 권력의 규제를 받게 되는 재조일본인 사회의 동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식민자와 피식민자에 대한 식민지 지배의 양상이 동일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4 Jun Uchida, *Brokers of Empire: Japanese Settler Colonialism in Korea, 1876~1945*,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11.

(Peter Duus)의 문제의식을 계승한 연구로 볼 수 있다. 두스는 개항기부터 한국병합에 이르는 시기를 대상으로 메이지유신 이래 일본인의 조선관과 일본 상인의 조선 진출 그리고 일본 상품의 시장 획득 과정을 분석한 바 있다.[5] 우치다는 두스의 문제의식을 심화시키면서 일본인 상공업자의 활동을 '이식자(정착자) 식민주의'(Settler colonialism) 이론을 원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식자(정착자) 식민주의' 이론은 구미 학계의 제국사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념으로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이론 중에서도 비교적 새로운 이론이다. 특히 백인의 식민지로의 이주와 토지 획득 과정에 나타난 폭력 문제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고찰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식민지 획득 혹은 신대륙으로의 이식 및 정착에 대해, 폭력에 의한 정복과 원주민 사회의 파괴라는 관점에서 역사를 재해석·재구성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6]

이러한 이론을 배경으로 우치다는 재조일본인의 존재를 '제국의 브로커'로 해석하고 분석의 틀로 삼고 있다. 재조일본인 상공업자를 식민지 통치 권력과 조선인 엘리트층 사이에서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치다는 조선인 엘리트층과의 협력 모색과 상공업자의 청원 활동을 식민자의 실익 중시 행동 패턴으로 해석하는 등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국의 브로커'라는 우치다의 해석틀은 총독부 지배가 안정적이었던 시기에 일본인들의 활동을 규정하는 데에는 유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기를 다루는 틀로서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든다. 이 글에서 다루는 3.1운동 시기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식자(정착자) 식민주의' 이론은 서양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건설한 식민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본의 식민지에는 부분적으로만 해당된다는 지적이

5 Peter Duus, *The Abacus and the Sword: the Japanese Penetration of Korea, 1895~1910*,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6 Settler colonialism 이론에 대해서는 Jun Uchida, *Brokers of Empire*, p. 18; Caroline Elkins and Susan Pedersen, "Introduction," Caroline Elkins and Susan Pedersen eds., *Settler Colonialism in the Twentieth Century: Projects, Practices, Legacies*, New York: Routledge, 2005를 참조.

유효할 수 있다.[7]

재조일본인 연구가 다양화·세분화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3.1운동과 재조일본인 사회를 다룬 연구 성과는 빈약하다. 최근 발행된 3.1운동 100주년 총서에도 당시 3.1운동을 목격하고 경험한 재조일본인의 반응과 인식을 다룬 연구는 수록되지 않았다.[8] 재조일본인 연구가 비교적 자료가 많이 남아 있는 1920년대 이후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예상되는 결과이기도 하다. 여기에 상공업자와 이들이 주축이 된 상업회의소가 재조일본인 연구의 주요 연구 대상이 되어온 경향도 그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1운동과 관련하여 재조일본인 사회의 인식과 대응을 다룬 연구로는 이승엽의 연구가 유일하다.[9] 이승엽은 강덕상 편저의 자료집과 1920년 가을 경성에서 개최된 '조선내지인실업가유지간담회'(全鮮內地人實業家有志懇話會) 회의록을 토대로 일본인사회의 대응과 인식을 고찰했다. 일본인들이 자경단을 조직하여 경찰 대신 직접 치안 유지를 담당한 사실과 일본인 사회의 주된 여론이 조선인 사회에 대한 강경책으로 기울어 있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그 외에는 3.1운동이 미친 사회적 영향을 다룬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기유정은 3.1운동을 통해 재조일본인 사회가 경험한 군중 정치의 체험이 이후 식민지 정치 공간에 미친 영향력을 고찰했다.[10] 이승엽과 마찬가지로 이 연구에서 사용한 내지인 실업가 간담회 자료는 시기적으로 3.1운동 후 1년 반

7 이 지적에 따르면 '이식자(정착자) 식민주의' 이론은 본국 정부로부터 자치를 보장받으면서 식민자 사회가 식민지 통치에 직접 관여하는 형태, 혹은 식민자의 특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식민지에 적용할 수 있다. 아프리카 대륙의 로데시아, 알제리, 케냐에 비해 식민지 조선과 대만은 자치권이나 식민자에 대한 제도적 특권 보장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식자(정착자) 식민주의' 이론을 식민지 조선의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는 좀 더 많은 논의를 요한다. Caroline Elkins and Susan Pedersen, "Introduction", p. 18.

8 후술하겠지만 시간이 경과한 후 3.1운동에 대한 재조일본인의 대응과 3.1운동이 미친 사회적 영향력을 다룬 기유정의 연구가 수록되어 있다. 한국역사연구회3·1운동100주년기획위원회 편, 『3.1운동 100년』, 휴머니스트, 2019.

9 李昇燁, 「三·一運動期における朝鮮在住日本人社会の対応と動向」, 『人文学報』 92号, 京都大学人文科学研究所, 2005.

10 기유정, 「식민지 군중의 "길거리 정치"와 식민자의 공포(1920~1929)」, 『도시연구』 19호, 2018; 『3.1운동 100년』 제4권, 2019.

쯤 지난 시점의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포스트(post) 3.1운동을 다룬 연구라고 할 수 있다.[11] 이처럼 식민지 조선에서 3.1운동을 직접 목격한 재조일본인 사회에 대한 논의가 빈약한 점은 다소 의아하게 느껴지기도 하나 결국 현존하는 1차 사료에서 오는 한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면서 의문이 드는 것은 3.1운동 직후의 상황과 시기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의 논의들이 뒤섞여 있다는 점이다. 대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하게 마련이다. 이는 후세에 의해 역사 인식이 변경되고 수정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3.1운동에 대한 재조일본인 사회의 인식도 시기에 따라 변화했을 개연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3.1운동에 대한 재조일본인들의 인식과 평가가 어떻게 변화했으며 어떠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이 글에서는 재조일본인들이 3.1운동에 대해 보인 반응과 인식이 '내지'(內地)의 일본인들과는 상당히 달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개 '내지'에서는 3.1운동을 군인들에 의한 폭정의 실패로 인식하고 문관에 의한 시정개선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내지인'(內地人)과 조선인 사이에 있는 차별 철폐가 논의되었다.[12] 총독부의 '무단정치'에 대한 비판론이 주류를 점하는 분위기에서 '문화정치'로의 이행은 당연한 귀결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재조일본인 사회의 여론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운동 초기 재조일본인들은 3.1운동을 국제 정세에 무지한 조선인들이 벌인 "경거망동"으로 치부하면서 조소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이후에는 조선인 사회에 확산된 '배일사상'과 조선인들의 태도 변화에 대해 위기감과 두려움을 나타내면서 무력을 이용한 위압적인 통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내지'의 일본인과 재조일본인들은 3.1운동을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에 분명한

11 그 외 재조일본인 발행 잡지에 나타난 3.1운동 관련 텍스트를 문학적 관점에서 다룬 연구도 있다. 정병호, 「3.1 독립운동에 대한 재조일본인 미디어의 반응과 1919년의 일본어 문학」, 『일본연구』 39호, 2015.

12 '내지' 언론의 반응에 관해서는 姜東鎭, 『日本言論界と朝鮮: 1910~1945』, 法政大学出版局, 1984, 제3장을 참조.

차이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식 차이는 어디에서 생겨났으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물음과 관련해서 이 글에서는 개항기부터 30~40여 년에 걸쳐 재조일본인이라는 식민자 집단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구축된 재조일본인들의 의식 구조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식민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피식민자인 조선인과의 조우 및 접촉을 통해 형성된 재조일본인의 의식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이 글에서는 '식민자의식'(植民者意識)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이러한 제국 일본과 식민지를 둘러싼 일본인의 의식 구조와 관련해 영국 제국사 연구자인 기바타 요이치는 '제국의식'론을 들어 설명한 바 있다.[13] 그는 '제국의식'이란 "스스로를 세계 정치 속에서 힘을 지니고 있으며, 지구상의 타 민족에 대해 강력한 지배권을 행사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 즉 제국의 '중심'에 속해있다는 의식"이라고 정의하면서, "자기 나라에 종속된 민족에 대한 인종차별적 멸시관과 이와 표리관계에 있는 자국민에 대한 우월의식에 기초한 것으로 자국민에 의한 이민족 지배를 뒤처진 민족을 지도·교화하고 '문명'화시키는 것으로 정당화하는 다양한 방법이 동반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후 제국이 붕괴되고 식민지가 독립한 이후에도 '제국의식'은 끈질기게 일본인의 의식에 잔영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기바타의 '제국의식'론은 이후 일본 역사학계에서 여러 형태로 수용되었다. 윤건차는 '제국의식'론을 원용하여 식민지에 거류한 일본인의 정신구조를 밝히고자 했다.[14] 그는 일본인의 정신구조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아시아 멸시관이며 '일본 민족'으로서의 우월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히로타 마사키는 '제국의식'론을 일본 제국사에 적용하면서 "대외 관계에 관한 의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타민족을 지배하는 국가의 구성원인 것에 자신의 정체성을 느끼는 의식"이라고 설명했다.[15] 히로타는 이러한 허위의

13 木畑洋一,『支配の代償: 英帝国の崩壊と「帝国意識」』, 東京大学出版会, 1987, 275~276쪽.
14 尹健次,『孤絶の歴史意識: 日本国家と日本人』, 岩波書店, 1990, 42~45쪽.
15 ひろたまさき,『日本帝国と民衆意識』, 有志舎, 2012, 85쪽.

식이 현재에도 마치 마귀처럼 세계를 움직이고 있으며 일본 사회를 지배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일본사에서 논의되는 '제국의식'론과 이 글에서 살펴보는 재조 일본인들의 '식민자의식'은 공통분모가 적지 않다. 양자 모두 피지배민족에 대한 멸시관과 우월감에 의해 구축되고 유지되는 의식 구조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다른 점도 존재한다. '제국의식'은 언론보도나 학교교육이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수단이 되며 국민이 명확하게 의식하지 못하는 형태로 익숙해지는 잠재의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16] 이에 비해 '식민자의식'은 식민지에 거주하면서 식민 통치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식민자 사회에서 형성되고 공유된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17] '제국의식'을 돔 모양으로 사회 전체를 감싸는 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식민자의식'은 식민자 개개인이 체험한 것들의 집합체이며 식민자 사회에서 축적되고 공유되어온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18]

이 글에서 다루는 3.1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는 '식민자의식'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인식 차이를 낳은 기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재조일본인 사회의 형성사에 다다르게 된다. 1870년대 개항 이후 형성되기 시작한 재조일본인 사회는 1910년 '한국병합' 시기에 이르러 인구 17만 명을 넘어섰다. 식민지 통치 권력이 도래하기 이전에 이미 대량의 식민자 사회가 형성되어 있었던 점은 재조일본인 사회를 이해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특

16 木畑洋一,『イギリス帝国と帝国主義: 比較と関係の視座』, 有志舎, 2008, 48~49쪽.

17 일반적으로 사회 구성원의 의식 구조는 공동체의 형성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일본에서 공동체의 일반적인 형태는 농업 특히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촌락공동체였다. 이 공동체는 토지를 물리적인 기반으로 하여 자연적으로 성립한 것으로, 원시적인 혈연 공동체에서 농업 공동체로 서서히 진화했다. 촌락공동체는 토지의 공유와 공동 이용을 바탕으로 하여 구성원 간의 상호 부조와 규제에 의해 유지되었다. 일본의 촌락공동체는 내부적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사회였으나 외부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성격이 짙었다. 이러한 촌락공동체에 비해 재조일본인 사회는 식민지를 토대로 인위적으로 형성된 식민자 집단이었다. 한반도 내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형성된 식민자 사회였으며 동일한 관습을 공유하는 촌락공동체와는 달리 서로 다른 관습을 지닌 출신자들로 구성되었다. 외부 즉 조선인 사회에 대해 배타적이었던 점은 촌락공동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18 아울러 '식민자의식'에 관해서는 李東勳,『在朝日本人社会の形成: 植民地空間の変容と意識構造』, 明石書店, 2019를 참조.

성 중 하나이다.[19]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3.1운동에 대한 재조일본인 사회의 인식을 '식민자의식'을 축으로 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시기별 인식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발생 초기(1919년 3월 및 4월)와 5월 이후 '문화정치' 시기로 구분하고 재조일본인 사회의 반응과 인식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어떻게 변화해갔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3.1운동에 대한 재조일본인들의 인식이 왜 '내지'와 다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3. 3.1운동 초기 재조일본인 사회의 인식

3.1운동 시기 재조일본인이 발행한 민간 신문 중 현존하는 자료는 인천에서 발행된 『조선신문』(朝鮮新聞)이 유일하다.[20] 3월 1일 자 석간을 살펴보면 고종의 장례식을 보기 위해 상경한 조선인들로 북적이는 덕수궁 대한문 앞 사진 등이 게재되었으나 3.1운동 관련 기사는 실리지 않았다. 다음날 2일 석간에는 전날 발표된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총독의 유고(諭告)가 게재되었으나 역시 운동 관련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21]

본격적으로 3.1운동 관련 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한 것은 총독부의 언론 통제가 풀린 3월 6일부터였다. 같은 날 석간은 전날 공포된 하세가와 총독의 두 번째 유고와 함께 '소요'(騷擾) 소식을 3면 가득히 전하고 있다. '지난 1일 경성에서 독립운동이 발생하여 주동자(원문에는 首魁者로 표기)가 검거되어 조사 중'이라는 기사를 비롯하여 각지에서 일어난 운동 소식이 보도되

19 하지만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시기는 1910년대 후반과 1920년대 초기로 한정적이다. 이 글에서 제시한 '식민자의식'이라는 개념은 개항기부터 재조일본인 사회가 형성되는 시기를 고찰하기에는 유효한 방법이지만 그 외의 시기, 즉 조선 태생의 식민자 2세가 사회에 등장하면서 지역으로서 조선이 부각 되는 시기 등에는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20 부산에서 발행되던 일본어 신문인 『부산일보』와 『조선시보』의 경우 해당 시기 지면이 남아있지 않다. 참고로 『조선신문』은 1919년 12월 인천에서 경성으로 발행지를 옮긴다.

21 「国葬儀と総督諭告」, 『朝鮮新聞』, 1919년 3월 2일(석간).

鮮人の妄動
煽動者に唆かされ一大デモンストレーション
「大韓國獨立」を絶叫する大集團
國葬終る
死傷者二十餘名
憲兵分隊長重傷
開城の示威運動

〈그림 1〉『조선신문』 1919년 3월 6일(석간)

었다. 1단에 실린 「조선인의 망동」(鮮人の妄動)이라는 기사를 통해서는 “무지한 조선인들이 어느 사람들에 의해 선동되어 이러한 망동”에 나선 것이라는 배후설을 확인할 수 있다.[22] 또한 독립운동이 사전에 준비되어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점에도 주목하고 있었다. 지역 소식으로는 경기도 개성, 평안남도 안주와 성천, 평안북도 선천과 의주, 황해도 사리원과 곡산 등 주로 경기도 이북 지역에서 일어난 운동 소식이 게재되었다.

이후 3월 한 달간 『조선신문』은 지역에서 일어난 소식을 비교적 상세히 전하고 있다.[23] 3.1운동은 ‘소요’(騷擾), ‘망동’(妄動), ‘폭동’(暴動)으로 묘사되었으며 여기에 참가한 조선인들은 ‘폭도’(暴徒), ‘폭민’(暴民), ‘불량학생’, ‘불순한 자들’(不逞の徒)로 칭해졌다. 아울러 ‘불온’(不穩)한 사상을 지닌 조선인들을 지칭하는 ‘불령선인’(不逞鮮人)이라는 표현이 재조일본인 언론에 폭넓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눈에 띄는 기사 제목을 나열하면 “폭도 헌병대로 몰려들어”, “경찰 주재소를 파괴”, “사상자 20여 명 헌병분대장 중상 입어”(3월 6일 석간), “폭민(暴民) 헌병주재소를 기습하여 교전”, “분대장 생명 위독”(3월 7일 석간), “평양 소식: 수천의 군중이 봉기하여 경찰서를 습격하고 돌을 던져”(3월 8일), “평안남도 불령한 자 1만여 명”(3월 8일 석간), “폭민 분견소를 습격”, “다수의 폭민과 싸워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다”(3월 10일 석간), “폭민 헌병대를 습격”(3월 12일 석간), “경찰서에 방화”(3월 13일 석간), “폭도 군대와 충돌”(3월 14일 석간), “폭도 분견소를 습격하여 병기를 약탈”, “불순한 자들 3천 명 검거”, “내지인 조선

22 「鮮人の妄動」, 『朝鮮新聞』, 1919년 3월 6일(석간).
23 같은 시기 『京城日報』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이 휘두른 칼에 베여”(3월 16일 석간), “주재소로 몰려든 2천 명의 폭도”(3월 27일)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기사 중에서 몇몇 사건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평안남도 성천(成川)에서는 약 3만 명의 조선인들이 몽둥이 등을 지니고 헌병분대소를 습격했다. 이 과정에서 시설이 파괴되고 헌병 분대장이 중상을 입었으며[24] 조선인 측에서는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25] 경무총감부가 발표한 조선인 참가자 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규모의 군중이 형성된 점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경기도 개성에서는 호수돈여학교 등 기독교계 학교 학생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만세를 외치는 형태로 시위가 진행되었다. 밤에는 군중 2천 명 이상이 파출소를 습격하였으며 유리창이 깨지는 등 충돌이 발생했다.[26] 평안남도 강서(江西)군 사천(沙川)에 위치한 헌병분견소에서는 조선인 시위대를 향해 280발을 발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27] 보조원을 포함하여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분견소 소장 부인은 한복을 걸쳐 입고 평양으로 탈출하기도 했다.

이들 신문 기사를 통해서는 민족 간의 충돌과 폭력 사태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대개 조선인들은 체포된 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경찰서와 헌병대로 몰려들어 항의를 했으며 그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에 따라 수백에서 수만에 이르는 조선인 군중들이 경찰 주재소와 헌병 분견대로 찾아가 몽둥이, 낫, 곡괭이 등의 농기구를 이용하거나 투석을 통해 위협을 가하는 방법이 동원되었다. 이러한 조선인 군중을 해산시키기 위해 헌병대와 경찰주재소가 총을 발포하는 등의 강경대응에 나서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수원에서는 자전거로 도피하려던 일본인 순사가 조선인이 던진 돌에 맞아 넘어진 후 구타당하여 사망에 이르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24 「死傷者二十餘名」, 『朝鮮新聞』, 1919년 3월 6일(석간).
25 「分隊長生命危篤」, 『朝鮮新聞』, 1919년 3월 7일(석간).
26 「開城の示威運動」, 『朝鮮新聞』, 1919년 3월 6일(석간).
27 「暴民憲兵駐在所を襲って交戦す」, 『朝鮮新聞』, 1919년 3월 7일(석간); 「朝鮮服を纏って重囲を脱す」, 『朝鮮新聞』, 1919년 3월 8일.

헌병과 경찰뿐만 아니라 민간의 일본인 사회에 대한 공격도 일상적으로 행해졌다. 일본인들의 퇴거를 요구하며 일본인 상점에 불을 지르거나 돌을 던지는 일이 지역마다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 일본인 고리대금업자의 집이 조선인들의 공격을 받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던 우편배달부가 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28] 또한 조선인 군중들은 헌병과 경찰을 무장해제시킨 후 이들에게 독립 만세를 외치도록 강요하기도 했으며 조선인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경찰과 헌병에게 협박문을 보내기도 했다.[29]

각지의 '소요' 소식이 신문을 통해 전해지면서 진의를 알 수 없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주동자들이 만세를 외치는 자에게 50전씩을 주고 있어 부랑자 및 부녀자가 꼬임에 넘어가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가 하면, 일본인들의 거주지인 경성 혼마치(本町)에 조선인이 불을 지를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30] 군산에서도 조선인들이 석유를 은밀하게 사들인다는 소문이 나돌아 재향군인회와 소방대가 야간 경비를 강화하는 일이 있었다.[31] 실제로 만세를 부르면 일본정부가 금전을 지급한다고 믿고 운동에 참가한 조선인이 있다는 기사[32]와 일본인 가옥에 방화를 한 조선인에 대한 기록[33]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단순한 유언비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자체적으로 자위단을 조직해 대응에 나서는 지역도 생겨났다. 개항장 거류지에서 부(府)로 발전한 지역 중 하나인 진남포에서는 마을(町)마다 야간 경비소를 설치하고 일본도(日本刀)를 들고 거리를 순찰하는 조직이 만들어졌다.[34] 마찬가지로 군산에서도 재향군인회와 소방대를 중심으로 야간 경비 조직이 만들어

28 지역에서 일어난 사례는 당시 재판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국가기록원기록편찬문화과 편,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2014; 국가기록원콘텐츠기획과 편,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Ⅱ)』, 2015.

29 「警官に脅迫状」, 『朝鮮新聞』, 1919년 3월 16일(석간).

30 「朝鮮騷擾事件の真相及び感想」, 『朝鮮及滿洲』, 1919년 4월호, 13~14쪽.

31 「各地の騷擾: 群山騷ぐ」, 『朝鮮新聞』, 1919년 3월 8일(석간).

32 「滑稽……好意の萬歲」, 『京城日報』, 1919년 4월 2일(석간).

33 예를 들어 국가기록원기록편찬문화과 편,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2014, 47쪽.

34 「日本刀を携へた夜警」, 『朝鮮新聞』, 1919년 3월 12일; 「騷擾地巡り: 鎮南浦から」, 『朝鮮新聞』, 1919년 3월 12일(석간).

졌다.[35]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 일본인들이 진압 과정을 지원한 경우도 있었다. 경남 김해에서는 재향군인회와 일본인 상인들이 경찰과 함께 운동 진압에 참여하기도 했다.[36]

이상으로 소개한 3.1운동 발생 초기 『조선신문』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직접 취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무총감부를 비롯한 당국[37]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가 작성되었다는 점이다.[38] 이 영향으로 독립 운동을 바라보는 총독부의 관점이 그대로 답습되는 경향이 있었다.

3.1운동과 관련해서는 하세가와 총독의 유고가 4차례 공포된 바 있었다.[39] 사건 당일인 3월 1일 유고에는 "황당무계한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자들이 민심을 현혹"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허구의 말을 날조하고 민심을 교란하는 자들을 엄중히 처분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전해졌다.[40] 이어서 3월 5일 유고에서는 파리강화회의에서 열강들이 조선의 독립을 승인했다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있었다는 점을 사태의 원인으로 들면서, 민족자결주의가 조선과 하등 상관이 없다는 점과 한반도 지배에 대한 일본의 주권은 확고 불변하다는 점이 재차 확인되었다.[41] 이러한 총독부의 '소요' 사태 인식과 원인 분석은 『조선신문』의 논조에도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둘째는 3.1운동에 대한 재조일본인 사회의 폄하와 조롱이다. 대개 조선인의 독립 운동은 '만세 소동'(万歳騒ぎ) 혹은 '하찮은 무리들의 꿈틀거림'(蠢動)으로 조롱당하거나 '경거망동'한 행위로 폄하되었다.[42] 여학생 참가자의

35 「群山尚ほ警戒」, 『朝鮮新聞』, 1919년 3월 19일(석간); 「群山の夜警」, 『朝鮮新聞』, 1919년 3월 28일.
36 국가기록원콘텐츠기획과 편,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Ⅱ)』, 2015, 52쪽.
37 신문 기사에서도 당국(その筋)에서 발표한 자료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38 조선신문사에서 기자를 급파하여 직접 취재한 경우도 있었다. 앞서 사례에서 소개한 평안남도 성천에서 일어난 헌병분견소 사건이다. 조선인 군중과 헌병분견소 사이의 충돌로 분대장(중위)이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해 "다수의 폭도들과 싸워 장렬한 죽음"을 맞이한 분대장은 영웅으로 묘사되기도 했다. 「目に餘る暴民と戦って壮烈なる死を遂ぐ」, 『朝鮮新聞』, 1919년 3월 10일(석간).
39 『朝鮮總督府官報』(호외), 1919년 3월 1일, 3월 5일, 4월 10일, 7월 1일.
40 『朝鮮總督府官報』(호외), 1919년 3월 1일.
41 『朝鮮總督府官報』, 1919년 3월 5일.
42 「朝鮮統治の実績を裏切る暴徒の蜂起」, 『朝鮮及滿洲』, 1919년 4월호; 「朝鮮騒擾事件と官民の所感」, 『朝鮮及滿洲』, 1919년 4월호; 「朝鮮の騒擾と総督政治の改善」, 『朝鮮公論』, 1919년 5월호; 『朝鮮新聞』 등.

경우 서대문감옥 신체검사 시 대부분 생리 기간이었다는 황당한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43] 이 기사에는 이들이 정신적으로 흥분 상태였으며 생리가 정신 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전직 군의관의 의견이 인용되었다. 아울러 조선인들의 참여는 자각과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것이 아닌 '군중심리' 혹은 '부화뇌동'에 의한 것으로 치부되었다. 이는 『조선공론』(朝鮮公論) 사장 마키야마 고조(牧山耕藏)가 "예부터 조선인은 부화뇌동을 즐기는 성질이 있다. 보통의 무지한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 달려드는 것일 뿐 반드시 밑바탕에 깊은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평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44] 또한 3월 27일 서울에서 다시 독립 운동이 발생하자 『조선신문』은 이를 "조선인들의 뱀과 같은 집요함"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다.[45] 이렇듯 독립운동에 참가한 조선인들의 이성(理性)과 자발성은 부정되었으며 "무지몽매한 다수의 조선인"이 누군가의 선동에 의해 일으킨 소동(騷ぎ)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46]

재조일본인 언론 중에서 이 같은 논조가 가장 강했던 것이 『조선과 만주』(朝鮮及滿洲) 잡지였다. 사장이며 집필자인 샤쿠오 슌조(釈尾春芿)는 사설에서 조선인들의 독립 주장은 "할 짓 없는 조선인들의 잠꼬대"이며 독립선언서는 "건방진 조선 유학생들의 무책임한 언사이며 장난"(方言悪戯)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47] 샤쿠오는 이에 그치지 않고 "독립 소동을 집요하게 십 년 혹은 백 년 계속해도 일본은 결코 조선을 내주지 않을 것이며 혹여 제군들이 독립을 달성하려 한다면 일본과 싸우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할 힘이 과연 있는지 조선인들에게 반문하기도 했다. 이처럼 3.1운동에 대한 조롱으로 점철된 그의 사설은 조선인들에게 현실을 직시하라는 충고로 마무리되었다.

그렇다면 발생 초기 재조일본인 사회는 '소요'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 어

43 「京城で騒擾せる女」, 『朝鮮新聞』, 1919년 3월 20일.
44 「朝鮮の騒擾と総督政治の改善」, 2쪽.
45 「京城又騒ぐ」, 『朝鮮新聞』, 1919년 3월 28일.
46 「朝鮮騒擾事件と官民の所感」, 59쪽.
47 「事を好む朝鮮人に与ふ」, 『朝鮮及滿洲』, 1919년 4월호, 2쪽.

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당시 재조일본인 간행 신문과 잡지 등에 나타난 원인론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파리 강화회의에서 논의된 민족자결주의를 조선인들이 오해하면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관점이다. 총독부 기관지 『경성일보』(京城日報)에 게재된 사설 「민족자결주의라는 오해」는 이러한 인식을 잘 보여준다.[48] 이 사설은 민족자결주의가 제1차 세계대전에 참가한 유럽 국가에 적용되는 논리이며 자결주의를 주장하는 미국이 정작 하와이와 필리핀의 자치를 허용하지 않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철저히 이상적인 문구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독립운동이 국제 정세에 대한 조선인들의 무지에서 일어난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논조를 보이면서 1910년 '한국병합'이 "동종동근(同種同根) 민족의 발전과 진취"를 위해 이뤄진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민족자결주의를 오해한 채 조선의 독립을 주창하는 행위는 "악마의 선동"으로 묘사되는가 하면, 참가한 조선인들은 "가공의 몽상"을 꾸고 있는 자들로 조롱받기도 했다.[49] 결국 이러한 독립운동이 자칫 조선인의 '자멸'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으로 사설은 마무리되었다.

총독부 관료들의 인식도 이와 대동소이했다. 예를 들어 고쿠부 산가이(国分三亥) 총독부 사법부 장관은 민족자결주의를 곡해한 조선인들이 벌인 일이라고 3.1운동을 평했다.[50] 아울러 유게 고타로(弓削幸太郎) 학무과장은 구미 사상이 유입되면서 일어난 일시적인 사건으로 보았다.[51] 이는 참가자 대다수가 학생이었던 점과 관련해 학무과장으로서 책임론을 회피하면서 내린 진단이었다.

둘째는 미국인 선교사와 천도교 지도자 및 신자들이 운동을 배후에서 선동했다는 시각이다. 『경성일보』에는 배후 선동자들을 비판하는 논조의 사설이 몇 차례 게재되었다. 한 예로 외사국장을 역임했던 고마쓰 미도리(小

48 「民族自決主義の誤解」, 『京城日報』, 1919년 3월 6일.
49 「所謂独立運動」, 『京城日報』, 1919년 3월 7일.
50 「最も厳重に処分せん」, 『朝鮮新聞』, 1919년 3월 12일(석간).
51 「騒擾事件と学校生徒」, 『朝鮮新聞』, 1919년 3월 14일(석간).

松緑)는 『조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선교사들이 조선인의 사상을 선동한 것을 강하게 비난했다.[52] 아울러 『조선신문』 사설에는 "마귀들이 숨어 있는 천도교"라는 연재 기사가 실리기도 했는데 천도교는 동학에서 출발한 것으로 불교와 유교에서 교리를 따와 섞어 놓은 것으로 종교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받았다.[53] 잡지 『조선공론』에도 비슷한 논조의 사설이 게재되었다.[54] 이렇듯 민족자결주의 오해설과 배후 선동설은 3.1운동을 바라보는 재조일본인 사회의 일반적인 시각이었으며 식민지 통치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는 시각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총독부 관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중의원에 설치된 조선신사(朝鮮神社) 조영(造營) 위원회에 참석한 스즈키 시즈카(鈴木穆) 탁지부 장관은 '조선소요'(朝鮮騷擾)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을 받은 자리에서 "이번 소동은 [총독부] 정치에 대한 불만이 아니다. 신지식을 지닌 일부 세력이 민족자결을 내걸고 사상이 천박한 천도교 신자들을 선동한 것"이라고 답변했다.[55]

또한 다수의 학생들이 운동에 참여하면서 책임론이 부상했던 학무국장 세키야 데이사부로(関屋貞三郎)가 밝힌 원인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3.1운동 당시 도쿄에 체류 중이던 세키야는 관련 질문을 받은 자리에서 "그들[조선인 청년 학생들]은 조선의 현황에 대해 아무런 불평이 없으며 민족자결주의를 오해하고 독립을 화려한 것으로 선망한 나머지 망동에 이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56] 아울러 그는 '내지'에 체류 중인 조선인 유학생이 지닌 사상에 대해서도 "그들은 정부와 학교에 대해 조금도 불평이 없으며 단지 독립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설명을 첨언했다. 결국 세키야는 총독부 통치에 대한 조선인의 불만이 사태의 원인이 아니며 외부로부터

52 「鮮人の思想を迷しめし米人宣教師の罪大也」, 『朝鮮新聞』, 1919년 3월 12일.
53 『朝鮮新聞』, 1919년 3월 11일(석간), 「魔の伏する天道教(一)」를 시작으로 3월 18일까지 연재되었다.
54 「朝鮮の騷擾を論ず: 誤まられたる民族自決主義」, 『朝鮮公論』 通巻73号, 1919년 4월, 2~6쪽.
55 「朝鮮妄動問答」, 『京城日報』, 1919년 3월 17일.
56 「内地の対騷擾感」, 『京城日報』, 1919년 3월 17일(석간). 학무국 책임론에 관해서는 「関屋学務局長に問ふ」, 『朝鮮及滿洲』, 1919년 4월호, 23~24쪽 참조.

의 사상 유입과 배후 선동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민간의 여론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일본조합교회 소속으로 조선에서 포교 중이던 와타세 쓰네키치(渡瀨常吉)는 "애초에 일본의 속박에서 벗어나 독립을 이루는 것이 그들이 바라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며 이를 조선인 자신들도 잘 알고 있다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일본과 병합되기를 바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다.[57]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소요'가 한국병합에 대한 반대운동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평했다. 와타세는 조선에서 포교활동을 하면서 미국인 선교사를 비롯해 조선인 기독교계 인사들과 자주 접촉했던 인물이지만 조선인들의 독립운동이 식민 통치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는 아니라는 의견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총독부가 지금껏 행한 통치를 선정(善政)으로 평가하며 오히려 이러한 훌륭한 통치가 '소요' 사태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개진되었다. 앞서 언급한 샤쿠오는 조선인들이 '만세 소동'을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 조선인의 기력과 지식이 증진된 결과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들은 10년간 총독정치를 거치면서 한국 시대의 악정에서 벗어나 생명 및 재산을 보호받았으며 위생이 개선되었다. 또한 산업이 점차 발전하고 교통이 나아졌으며 교육이 점차 개선되어 … 그들이 일본을 향해 반대할 수 있었던 원인을 일본이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총독 정치에 대해 반항할 기력을 총독부 스스로가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마치 어미개가 자신이 키우던 새끼에게 물린 것과 같은 이치일 것이다.[58]

한국정부의 압제적인 통치에 허덕이던 조선인들이 '한국병합' 이래 총독부 통치 아래에서 보호되고 발전해왔는데, 조선인들이 새로운 지식을 습

57 「朝鮮騷擾事件の真相と其の善後策」,『新人』225号, 1919년 4월, 22쪽.
58 「朝鮮騷擾事件の真相及び感想」,『朝鮮及滿洲』, 1919년 4월호, 16쪽.

득하고 내적으로 성장한 것이 오히려 화를 불러왔다고 본 것이다. 또한 그는 조선인들은 강자에게 온순한 양처럼 복종하지만 그것은 외면적인 것일 뿐 내면의 심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평했다. 또한 조선인들이 제대로 된 무기와 언론 기관도 하나 없이 "파리처럼 만세 만세라고 떠들고만 다닌다"고 조롱하면서 조선인들은 빈틈을 주어서는 안 될 민족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59] 사태의 원인을 '무단통치'에 대한 조선인들의 반발로 보면서 조선인 사회에도 어느 정도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지' 언론의 시각을 일축한 샤쿠오는 "[일본인] 관민 모두가 단호하고 엄중하게 조선인들을 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60]

마찬가지로 '소요' 사태를 일으킨 '불령선인'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는 것이 재조일본인 사회의 일반적인 여론이었다. 『조선신문』에는 고쿠부 사법부 장관을 비롯한 지방법원 검사정(檢事正) 등 사법부 관련 인물의 의견이 게재되기도 했는데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는 국법에 의해 근절되어야 하며 시위 가담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다.[61]

4. 5월 이후 '문화정치' 시기 재조일본인 사회의 인식

3.1운동은 조선총독부를 비롯해 일본 정부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었다. 조선의 '소요' 사태에 대응하면서 당시 하라 다카시(原敬) 내각과 조선총독부는 협의를 거쳐 군대를 조선에 파견하여 무력으로 진압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 그 후 군대 파견에 대한 국내외 비판 여론을 의식하면서 하라 내각은 총독부의 개혁을 단행하게 된다. 1919년 9월 사이토 마코토(斎藤実) 총독이 부임하면서 이른바 '문화정치'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식

59 「朝鮮騷擾事件の真相及び感想」, 16~17쪽.
60 「如何に此時局に処せんとするか」, 『朝鮮及滿洲』, 1919년 4월호, 20~22쪽.
61 「最も厳重に処分せん: 軽挙妄動の徒は男女を問はず」, 『朝鮮新聞』, 1919년 3월 12일(석간).

민 통치의 전환과 함께 지난 '소요' 사태에 대한 재조일본인들의 인식과 평가 또한 변화를 보이게 된다.

5월 이후 '소요'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일본인 사회의 인식과 여론에도 다소나마 변화가 나타났다. 잡지 『조선과 만주』(朝鮮及滿洲)를 보면 "이번 소동으로 데라우치 시대부터 오랫동안 선정(善政)을 홍보하고 조선인들이 기꺼이 복종한다며 조선의 평화를 선전하던 총독부 관리들을 놀라게 한 점"에 대해서는 실소를 금치 못한다고, 다소 조롱 섞인 뉘앙스이기는 하지만 3.1운동이 초래한 정치적 변화를 일부 평가하는 샤쿠오의 사설이 게재되기도 했다.[62] 샤쿠오는 이번 사태가 데라우치 방식의 통치가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억압적인 통치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총독부 통치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시정 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동양척식주식회사 총재였던 이시즈카 에이조(石塚英藏)는 세계적인 민주주의 흐름을 언급하면서 '한국병합' 당시의 통치 방식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니 총독부 통치가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63] 하나의 방법으로 조선인에게 어느 정도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는 방안이 언급되었다.

여기에서 샤쿠오는 한발 더 나아가 지방 자치 기관을 설치할 것과 참정권 부여 및 조선 의회 설치를 주장하기도 했다.[64] 이러한 사실을 보면 일본인들은 '소요'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총독 정치를 개선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3.1운동으로 인한 정치적 변동을 경험하면서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소요' 사태의 원인론으로는 ① 조선인들의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오해

62 「朝鮮政治を如何に一新すべきか」, 『朝鮮及滿洲』, 1919년 6월호, 3쪽.

63 「今後の朝鮮を如何に治むべきか」, 『朝鮮及滿洲』, 1919년 6월호, 32~33쪽.

64 하지만 그와 동시에 조선인 사회를 위한 정책으로 인해 일본인 사회가 희생당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일본인들이 가진 기득권 확보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긋기도 했다. 「朝鮮政治を如何に一新すべきか」, 2~10쪽.

② 미국인 선교사와 천도교 신자의 선동이라는 요인 외에,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상호 이해 부족과 조선인의 친미 사상을 드는 의견이 있었다.[65] 또한 총독부의 통치 방식과 조선 거주 '내지인'의 악행을 사태의 주된 요인으로 주목하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소요' 사태에 대한 조롱과 폄하에서 다소 벗어나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자 하는 흐름이 생긴 것이다.

첫째는 조선인들이 억압적이고 무단적인 총독부 통치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된 것이 '소요' 사태의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66] 좀 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총독 통치의 억압적인 성격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둘째 원인으로는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의 차별적인 태도가 거론되었다. 예를 들어 진남포상업회의소 회두(會頭)인 바바 가조(馬場嘉藏)는 "조선인들이 말하는 인종차별이 [3.1운동의] 주된 요인"이라고 평했다.[67] 이 외에도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의 차별적이고 교만한 태도로 말미암은 반감이 다년간 축적되어 '소요' 사태를 조장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는 일본인 스스로가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졌는데 일상적으로 조선인을 무시하는 태도와 '요보'(ヨボ, 당시 재조일본인들이 조선인을 지칭할 때 사용하던 말로 차별적이고 멸시적인 뉘앙스가 담겨있는 용어)라는 호칭의 사용이 문제로 거론되었다. 식산은행 총재인 미시마 다로(三島太郎)는 "무엇보다 조선인이라면 무조건 바보 취급하는 일본인들의 행태"를 지적했다.[68] 『조선과 만주』 사설에서도 일본인들의 조선인 멸시관이 문제로 떠올랐다. 샤쿠오는 "관민(官民) 너 나 할 것 없이 조선인들을 열등한 민족"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조선인들을 멸시하고 의붓자식(繼子) 취급하는 풍조"가 어느 조직에서나 있다고 지적했다.[69]

65 가령 매일신보 사장인 가토 후사조가 1920년 8월~10월에 걸쳐 『경성일보』에 게재한 사설에서 이런 의견이 나타난다. 加藤房蔵, 『朝鮮騷擾の真相』, 京城日報社, 1920 참조.

66 원인론에 관해서는 「朝鮮政治を如何に一新すべきか」, 2~10쪽 및 「原内閣は如何に朝鮮問題を解決せんとするか」, 『朝鮮及滿洲』, 1919년 7월호, 5~7쪽 등을 참조.

67 「貴衆両院議員其の他朝鮮名士の朝鮮騷擾観と今後の統治策意見(一)」, 『朝鮮公論』 通巻77号, 1919년 8월, 60쪽.

68 「朝鮮人と云ふので馬鹿にするのが一番悪るい」, 『朝鮮及滿洲』, 1919년 6월호, 41~42쪽.

69 「朝鮮政治を如何に一新すべきか」, 3쪽.

조선인들의 의견을 필요에 따라 경청하고 지금까지의 일본인들의 태도를 반성해야한다는 의견이었다.

이와 함께 일본인들이 사용한 '요보'라는 호칭과 관련해서는 조선인의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한일은행 전무였던 김한규는 "조선인들을 열등 인종 취급"하는 일본인들의 태도를 비판했다.[70] 또한 한성은행 지배인이었던 석진형은 "일본인들은 관민 가릴 것 없이 조선인들을 열등시하고 '요보' 주제에 무슨 소리냐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하며 '소요' 사태의 원인 중 하나는 일본인들이 제공했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71]

아울러 조선의 역사와 조선인 사회의 독립 의지를 이해하는 논조도 확인된다. 샤쿠오는 사설에서 조선어로 된 언론과 정치 결사를 금지하고 총독부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조선인을 노예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3천 년 역사를 지닌 한반도에서 민족의식을 지닌 자들이 조선인들의 땅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는 이상, 독립을 단념시키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평하기도 했다.[72]

하지만 이러한 일본인 사회의 반성과 조선인 사회에 대한 이해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다. 앞서 제시한 샤쿠오의 사설에서는 독립에 대한 의지를 단념시키는 방안으로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는 작업, 내선결혼, 일본인들의 이주가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이어졌기 때문이다.[73] 또한 샤쿠오는 조선인들의 요구를 일부분 들어주는 것에는 찬성하면서도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차별을 철폐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했다. '소요' 사태 후 일부 '내지' 언론에서 제기된 차별 철폐론에 대해서는 "내지인의 입장과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망론에 불과하다"고 평하면서, "실제 양 민족이 지닌 지식, 인격, 생활의 차이"에 대해 '내지'에 사는 자들은 모른다고 비꼬아 비판하기도 했다.[74] 이처럼 '소요' 사태 발생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총독부 통치

70 「時局に対して: 吾々の不平」, 『朝鮮及滿洲』, 1919년 5월호, 28쪽.
71 「朝鮮騷擾事件と官民の所感」, 59쪽.
72 「朝鮮政治を如何に一新すべきか」, 8쪽.
73 「朝鮮政治を如何に一新すべきか」, 8쪽.
74 「原内閣は如何に朝鮮問題を解決せんとするか」, 7쪽.

와 일본인 사회의 행태가 거론되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앞서 살펴본 내용보다 실상에 가까운 재조일본인 사회의 여론은 1920년 10월 경성에서 개최된 '조선내지인실업가유지간담회'(全鮮內地人實業家有志懇話會) 회의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75] 이 집회는 지역의 유력 실업가가 참가하여 '소요' 사태 이후 지역별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76] 초대된 사람 외에 방청이 금지되었고 비밀회의로 진행되었던 탓에 참가자들은 노골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77] 이러한 측면에서 간담회 회의록은 3.1운동에 대한 일본인 사회의 여과되지 않은 인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우선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근래 조선 각지에서 조선인의 사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은 우려할 상황"이라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인 사회에 대한 '강경론'과 더불어 '문화정치'로의 이행에 대한 불만이 일본인 사회내에서 표출되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아오야기 쓰나타로(青柳綱太郎)는 조선에 있는 일본인들이 하세가와 총독의 대응에 우려를 표하면서 "데라우치 백작이 다시 조선총독이 되어 '조선소요'를 단번에 진압해줄 것을 바라는 목소리가 각지에 있었다"고 회상하고 있다.[78] 즉 일본인들은 폭력 사태와 사상자 발생을 경험하면서 조선인 사회에 대한 좀 더 강경한 탄압을 요구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해서인지 간담회에서는 군대 증파와 경비 부대의 증가가 논의되었다. 대구에서 상경한 참가자는 "당국의 조치는 미온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조선인은 본시 채찍에 의해 성장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동반된다면 조선인의 불순한 꿈틀거림(蠢動)은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79]

75 永留信孝編, 『全鮮内地人実業家有志懇話会速記録』, 懇話会事務所, 1920.
76 간담회의 개요에 대해서는 『全鮮内地人実業家有志懇話会速記録』, 14~15쪽; 李昇燁, 「三·一運動期における朝鮮在住日本人社会の対応と動向」, 133~135쪽.
77 『全鮮内地人実業家有志懇話会速記録』, 4쪽.
78 青柳綱太郎, 『総督政治史論』 前編, 1928, 413~414쪽.
79 『全鮮内地人実業家有志懇話会速記録』, 29쪽, 31쪽.

여기에 일본인 이민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앞서 인용한 대구 참가자가 "백만 정도의 내지인을 이곳에 이식하면 이것 자체가 통치 정책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하자 관중들은 박수갈채로 화답했다.[80] 목포에서 참가한 자는 "일본인이 많이 오지 않으면 조선은 개발되기 어렵다"고 평했으며 함흥에서 온 참가자는 "조선인의 십분의 일, 즉 150만 명 정도의 내지인을 이주"시킬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81] 일본인의 대량 이주가 3.1운동과 같은 '소요' 사태를 막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처럼 3.1운동 발생 후 1년 반 정도가 지난 시기에 일본인 상공업자들 사이에 논의된 주된 내용은 조선인 사회에 대한 강경론과 일본인 이민의 장려로 정리할 수 있다. 일본인 이민 문제는 '내지'와 식민지 조선을 불문하고 공통적인 논의 과제였다고 할 수 있지만 무력을 이용한 강경론은 '내지'의 여론과는 매우 상이한 상황 판단이었다. '내지'에서는 군인들에 의한 '무단통치'가 비판 대상이었으며 대다수의 중의원 의원은 지금까지의 억압적인 통치를 비판했다. 일반 사회에서도 문관에 의한 '문치'(文治)를 비롯한 통치 방식의 개선을 주장하는 자가 대부분이었다. 『태양』(太陽), 『일본과 일본인』(日本及日本人), 『중앙공론』(中央公論) 등 주요 종합 잡지에는 요시노 사쿠조 등의 조선 통치 개혁론이 게재되었고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82]

이러한 '내지'의 여론과는 달리 재조일본인 사회에서는 무력을 이용한 더욱 강력한 통치를 요구한 것인데 이는 당시 조선을 방문한 일본인들의 기록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83] 일본 감리교 방문단은 3.1운동의 열기가 가시지 않은 5월과 6월에 부산·대구·경성·평양 등 주요 지역을 시찰했으며 미국인 선교사와 조선인 신자, 그리고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과의 만남을

80 『全鮮内地人実業家有志懇話会速記録』, 52쪽.
81 『全鮮内地人実業家有志懇話会速記録』, 83~84쪽.
82 姜東鎭, 『日本言論界と朝鮮: 1910~1945』, 제3장 제2절을 참조.
83 이하 시찰 기록은 『朝鮮問題雑纂』(阪谷文書) 1巻(일본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 우방문고 소장) 중 제8호 「朝鮮騒擾地巡回日誌」 및 활자화된 자료인 近藤釼一 編, 『万才騒擾事件(三 · 一運動)(1)』, 友邦協会朝鮮史料編纂会, 1964를 참조.

가졌다. 이들이 만난 재조일본인 대다수는 조선인 사회에 대한 강경책을 주장했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어느 일본인은 조선인을 대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력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20년 이상 조선에 거주한 사람으로 조선인 사회를 이해한다는 인물의 발언이었다. 개성에 거주하는 일본인 기독교 신자는 '소요' 사태의 원인을 총독부 통치가 너무 온건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조선인은 "원래 이해 불가능한 성격을 지닌 자들로 위압적으로 무력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 그 자신은 조선인 아내를 둔 인물이기도 했다.

각지에서 이러한 강경론을 접하자 감리교 신자들은 이를 다소 '기이'하게 받아들였다. 조선에 오랫동안 거주한 인물로 조선인과 조선 사회를 이해한다고 자처하는 인물들의 입에서 나온 의견이었기 때문이다. 시찰자들은 일본인이 조선인을 열등하게 취급하며 "노예처럼 대우"하거나 "동물처럼 학대"한다는 호소를 각지의 조선인들로부터 접했다. 또한 태형(笞刑)으로 살갗이 벗겨진 조선인과의 만남을 통해 비근대적 형벌이 존재하는 조선 통치의 실상을 목격하기도 했다. 이들은 시찰을 통해 총독부 통치의 억압적이고 무단적인 행태를 목도한 와중에 조선 거주 일본인들이 이보다 더한 강경책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자 의아한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이다.

5. 맺음말

이 글에서는 3.1운동을 발생 초기와 진정 국면 후 '문화정치' 시기로 구분하고 재조일본인 사회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재조일본인 사회에 공유된 의식 체계를 '식민자의식'으로 정의하고 그 성격을 다루었다.

3.1운동 발생 초기 재조일본인 사회는 이 운동을 일부의 '폭도'가 일으킨 '만세소동'으로 폄하하면서 조소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국제 정세에 무지한 조선인들이 이상에 불과한 민족자결주의를 맹신한 탓에 일어난

해프닝으로 보는 시각이 다수였다.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도 '무단통치' 시기에 행해진 억압적인 식민 통치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보다는 외부 배후설을 제기하는 자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문화정치'로의 전환이라는 뜻밖의 정치적 수확을 경험하면서 일본인 사회에도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무단정치' 시기에 행해진 억압적인 통치와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의 횡포를 일부 인정하면서 자성을 촉구하는 의견이 등장한 것이다. 총독부 통치에 대한 조선인 사회의 불만과 요구 사항을 역으로 이용하여 일본인 사회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인식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반드시 조선인 사회에 대한 일본인들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3.1운동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은 '내지'의 일본인과 재조일본인 사이에 상당한 인식 차이가 존재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의 괴리는 본문에서 언급한 '식민자의식'과 관련해 설명할 수 있다. 식민자의 의식 체계가 형성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피식민자와의 관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재조일본인의 의식 체계는 피식민자인 조선인과의 조우 및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즉 재조일본인의 '식민자의식'은 조선인들에 대한 타자 인식을 기초로 형성된 것으로 '내지'의 일본인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재조일본인들의 '식민자의식'은 그 태생부터 외부 사회 즉 조선인 사회에 대해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배타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재조일본인들은 3.1운동 후의 식민지 통치와 관련해, 조선인 사회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강경책을 주장했던 것이다.